데스크 시각

박치경

'2007년 4월의 여수'를 기억하라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의 기치가 올랐다. 지난 17일 2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위원회'가 창립돼 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U대회는 세계의 대학생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여름과 겨울로 나눠 스포츠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젊음의 축제다. 이념과 빈부의 차이를 넘어 대학생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지구촌의 잔치가 곧 U대회다.

국제도시로 가는 디딤돌

이처럼 전 세계 청년들이 만나 여는 U대회는 국제 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의 정체성과 꼭 들어맞는 행사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만나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나누는 자리여서 '글로벌 광주'로 도약하는 데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광주시는 그동안 수많은 행사를 통해 바깥 세상에 이름을 알려 왔다. 광주비엔날레, 2002년 월드컵 대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등은 광주가 국제도시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토대 위에서 U대회는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성공을 위해서도 U대회는 필수적이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외부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여 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에 국제행사인 U대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가 각각 9천500억 원과 4천500억 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도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대회 유치는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미 러시아 카잔 시와 캐나다 퀘벡 등 5개 국 7개 도시가 2013년 대회 유치 의향을 갖고 있어 경합이 뜨거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회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개최 의지다. 오는 3월 15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현지 실사에 나선다. 실사에서는 대회 준비상황은 물론 개최지 시민들의 '열의'를 비중있게 다룬다.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U대회 유치를 위해 꼭 되새겨볼 일은 지난해 4월 여수시민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현지실사에서 보여준 '열정'과 자발적인 '참여'다.

당시 30만 여명의 여수시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연도에서 "예스 여수!"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를 갈망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도, 퇴근길 직장인들도 거리에 나와 "여수 엑스포!"를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현지에 직접 내려와 실사단을 위한 만찬을 주재하며 한국 정부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한번의 '감동' 절실

특급호텔 하나 없어 혹여 점수가 깎이지나 않을까 속을 태우던 여수시는 실사단을 배에 태워 바다 구경을 시키며 겨우 체면치레할 수 있는 이웃 경남 남해의 숙박시설로 안내하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여수시민과 우리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를 확인한 엑스포 실사단은 "액설런트"라고 화답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27일 2012여수엑스포 개최 확정의 감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2002년 한 차례 실패의 아픔을 딛고 따낸 여수엑스포 개최권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여수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U대회 개최를 위해 광주 시민들이 나설 때다. 광주시와 정부 관련 부처의 유치 노력만으로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다른 상대들을 이겨내기 어렵다. 광주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인 2013 하계 U대회 유치는 바로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상하

사회적 기업의 성공조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2차에 걸쳐 54개를 인증하면서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세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다. 그래서 자선사업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이다.

빌 게이츠는 이것을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했다. 신자본주의 또는 일부 학자들은 제3의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승자 독식과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인본적이며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그러나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 영국에서 성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5만5천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며 연간 총 매출은 270억 파운드 이상으로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은 시장과 정부의 경계선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섹터를 이론적 배경으로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나라마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사회적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며 유럽의 경우 조합형식이 많은 반면에 미국은 NGO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개발과 사회적 욕구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 목적이 훌륭하고 공익성이 담보된다 해도 이윤창출 없는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인사, 노무, 회계 등 마케팅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 대부분이 시장성보다는 공익성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다보면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의 자활사업과 차별화가 안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영리부문의 상업화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적 기업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업과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기부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한다. 더욱이 생산하기 위해 고용하기보다는 고용하기 위해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린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이 성공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나주대 교수·2007년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고

신정훈

영산강을 살리자, 뱃길을 열자

영산강은 담양 용추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흐르며, 호남의 곡창 나주평야를 살찌우는 남도민의 젖줄이다.

그러나 영산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물길이 아니다. 6만년 전부터 구석기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통하는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로였다. 신라말 고려 초 왕건과 장화황후로 상징되는 영산강 해상세력이 고려건국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곳이 영산강이었다. 또한 조선을 개국한 일등공신 정도전이 귀양지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 곳 역시 영산강이었다.

이처럼 영산강은 예부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자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온 남도의 젖줄이며 호남 역사문화에 있어 정체성의 근간이기도 하다. 영산강이 소통되고 끊임없이 흘러 흘러 서해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역사의 전면에서 자랑스럽게 그 책무를 다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영산강의 존재적 가치를 망각하지 않았나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21세기 역사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지난 2005년 12월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영산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영산강 뱃길복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영산강 뱃길, 생태 복원의 실마리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중차대한 지역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산강 뱃길복원과 수질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새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된 우리의 강을 되찾아야 한다.

우선 생태를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강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는데 역점을 두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위한 안식처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영산강을 통해 호남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에 대한 재조명은 호남의 정체성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맥이다. 남도의 독창적 문화를 새롭게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 역사적 가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역동적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 대운하구상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이 영산강 뱃길복원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해소해 나가면서도 영산강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경제 동맥으로서 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및 영산강 뱃길복원을 필두로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및 3대산업 육성, 영암·해남의 관광레저형 및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영산강 문화·경제권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세기가 한강과 낙동강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영산강의 세기, 영산강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한다. 〈나주시장〉

빛고을 광주 솔라시티로 청정도시 거듭났으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물·바람·조류 등 자연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 도시 건설인 솔라시티다. 솔라시티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나 온수를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는 도시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됐다.

홍콩은 지난 1999년 시내버스 승강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승강장에 설치된 광고판의 전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미국도 동물원, 지역사회 주민센터 등 대중이용 시설에 집중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한다.

광주시도 솔라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를 제정하고 솔라시티센터도 구축했다. 무등산 등 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심에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가장 가치있는 사업인것 같다. 빛고을 광주가 솔라시티로 거듭나 청정도시로 탈바꿈했으면 한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광주가 솔라시티 선두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도시 봉사자 - 농촌 독거노인, 자매결연 활발했으면

광주일보에서 가끔 '홀로 사는 농촌 노인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읽는다. 농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의 홀로노인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이의 해결책으로 필자는 민간인 자원봉사를 제안한다. 도시인들 중에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농촌의 홀로 되신 어르신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봉사자는 요일별로 정기적으로 안부인사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찾아 뵙는다면 우울한 소식들은 줄어들 것이다.

도시의 독거 노인들은 자원봉사자도 많고 사회복지사들이 찾아다니며 챙기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보다 여건이 훨씬 좋다. 그러나 농촌 노인들은 평생 농촌을 지키며 일만 하다 나이 들어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외롭겠는가.

광주·목포·여수 등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독거노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면 웰빙 생활과 보람, 행복을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도시 자원봉사자들과 농촌 어르신 간의 자매 결연하는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태동

사설

광주·전남 산단 '엉터리 규제' 뿌리 뽑아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는 지방에서 기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대불산단 전봇대'는 광주·전남지역 산단 곳곳에 널려 있다. 지역 내 산단의 인프라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광주 하남산단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해 입주업체들이 물류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8㎞에 이르는 간선도로의 절반은 겨우 왕복 4차선이다. 이 도로를 900여개 입주업체, 2만5천여명의 근로자와 하루 10만여 대에 이르는 각종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그나마 산단 내에는 공용주차장조차 없어 도로 양쪽을 각종 차량이 점유해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산단도로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실정이다.

전남 동부권의 핵심산단인 여수산단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54㎞에 달하는 산단 내 도로 가운데 31㎞는 여수시가, 나머지 23㎞는 입주업체들이 관리를 맡고 있다. 관리·유지 주체가 다르다 보니 도로 곳곳이 훼손돼도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여수시는 도로 점용료만 챙기고 관리책임을 입주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농공단지도 문제다. 용적률이 일반 공장용지나 지방산단에 비해 훨씬 낮아 공장 증설 등 추가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다.

기반시설이 열악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전봇대 하나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규제에다 인프라마저 열악한 곳에 어느 기업인이 공장을 짓겠는가.

지방산단의 인프라 확충은 지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는 지방 산단의 엉터리 규제와 탁상행정부터 뿌리 뽑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방경제 살리기는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지방산단 여건을 만드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입제도 또 변경 수험생은 혼란스럽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대학입시의 자율화와 수능 등급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선발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손을 떼게 된다.

수능 등급제를 시행 1년만에 폐지한 이유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등급 외에는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 등급으로는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다. 원점수가 높더라도 커트라인에 걸려 등급이 낮아지는 모순도 드러났다.

대학들은 대체로 새 대입제도를 환영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전국대학입학처장들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 이후에 새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서울지역 일부 주요 사립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시행을 반기고 있다.

어떤 대입제도든 100%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현행 제도에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예고기간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수능 등급제도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2004년 개선안을 마련한 뒤 4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런 제도를 단 한 차례 시행한 뒤 전격 폐지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새 대입제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학입시가 완전 자율화되면 대학의 자율과 경쟁, 교육의 다양화 등 장점이 있지만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증가, 대학 및 학생 서열화 등을 조장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문이다.

수능 등급제에 맞춰 준비해온 고등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본고사 부활 논란까지 일고 있다. 변경된 대입제도가 다시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이렇게 자주 흔들려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無等鼓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 속도를 내면서 '사고(事故)'가 잦아지고 있다. 미완의 구상을 내놓았다가 거둬들이는 정책 혼선부터,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와 같은 '구태 파문'까지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다. 알짜 정보를 소수 측근들이 독점하면서 출처 불명의 보도 양산과 보안사고도 터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단계에서 발표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신중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은 긴 안목으로 정권의 뼈대를 만들어야 할 인수위가 당장의 성과에 매달리고, 그 과정에서 사견과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과시욕'과 '충성경쟁'이 원인이 아닐까 싶다.

'충성경쟁'이 빚은 대표적인 사고는 지난 17일 공식발표 4시간만에 백지화한 '산업평화정착TF'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이다. "노사관계만 바로 잡히면 1%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따른 것이지만, 그 파장에 대한 검토없이 서둘렀다가 과잉충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며 '구태 회귀'를 꼬집었다. 국정원 업무보고 직후에는 인수위 지시로 국정원이 주요 대기업의 고용·투자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설익은 정책이나 사견을 내놓았다가 '없었던 일'로 하는 일도 잦다.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다. 이달 초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대민사업이 많은 복지·노동·환경부 같은 곳은 예산 경직성이 높은데도 무조건 10%를 줄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법률에도 없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겠는가. 인수위가 보다 신중한 자세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골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온 국민들의 바람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